

한국노총, '문재인' 지지 결정 발표

“노동현안 해결 의지 높이 평가” 문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예정... 민노총 ‘심상정·김선동’ 지지

한국노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적극적인 유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노총본부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선 지지후보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총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67만4464명중 35만1099명이 참여해 문 후보가 16만4916표(46.97%)를 얻어 한국노총 지지후보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다른 후보 4명의 득표 내용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총투표에 참여한 산하조직은 모두 1667개로 51.6%가 참여했다. 다만 해상노련과 우정노조는 근무형태 및 공무원관계법에 따라 배제됐다.

한국노총은 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의 위법한 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및 비정규직 감축 등 노동현안 해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5월1일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를 거쳐 지원방안을 결의한 뒤 지지후보로 확정된 문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표참여 독려, 인터넷·문자메시지 등



형형색색 정책요구 민주실현추진자회의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중복몰이 색깔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정책요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을 통한 한국노총 지지후보 홍보, 유세지원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 후보는 과거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서민대중과 아픔을 함께한 경험이 있

는 만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심상정 정의당 후

보 김선동 민주연합당 후보를 19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위원장이 공식인 가운데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진보정당 후보들을 모두 지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현직 지방의원들, 민주당 입당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원들의 입당으로 힘을 얻고 있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과 완주군의회 류영렬 의원, 배성기 진안군의원, 김상철 전 도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촛불민심의 염원을 담아내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복원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전반적인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상식과 정의로 국민을 통합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대통령을 뽑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튼튼한 문재인 후보와 지역발전의 큰 뜻을 함께 이룰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군의원은 모두 127명(전체 197명)이다. /인재용 기자

최정의, 민주당 조직본부 특보단 부단장 임명

최정의 전 김제시의회 의원이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특보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 광주지구당에서 생애도 민주당 중앙당 조직본부 특보단장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제3, 6대 김제시의회 의원 및 제3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연락소장 및 김제시선거대책공동위원장, 김제시배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정의 부단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 것발에 이곳에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김제,부안지역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진호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42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운송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주로 택시운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및 안전 분야에 지원하게 된다.

최진호 의원은 “택시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택시운송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도민불편은 물론 택시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운송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전북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한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 택시운송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법인택시업체는 91개이며, 개인택시는 5,707대로 그동안 도에서 지원한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불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는 영상기록장치 확충, 택시요금 통신료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게 되며, 경기.충남에 이어 광역도 중 3번째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중고교 교사, 2025년계 1만8000명 초과 공급”

감사원,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등 17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교육부가 잘못된 판단기준으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고교 교사가 오는 2025년계 1만8000명 가량 초과 공급될 것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2015~2025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중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춘다는 목표에 따라 중고교 교원을 2015년 13만7799명에서 2025년 14만6269명으로

8470명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교육부는 필요한 교원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OECD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모두 더한 전체 교원 수로 산출된 것인데 교육부는 계약직 교원 수를 제외한 정규직 교원 수를 기준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OECD 기준대로 계약직 교원까지 더해 재산정해보니 2025년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0명까지 낮아지며 중장기 수급계획상 정員(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측에 의한 교원 정

원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정한 교원 정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의 경우도 지난해 선발된 교원 중 21%(1187명)가 그 해에 임용되지 못하고 임용대기자로 남을 정도로 수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의 결원 예상 인원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연구용역 인건비와 관련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학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용역과제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 확인결과 35개 국립대학 산 학원력단에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이중지급이 발생해 124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인건비 이중지급의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인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보증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57개 학교법인이 임대보증금 930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3개 학교법인은 1381억원을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